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 초록

- ◎ 1인 가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관계와 형태의 변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령층의 은퇴 시점 변화, 개인의 인식 변화 등에 기인한 것임.
- ◎ 1인 가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지역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위기 시 돌봄 공백, 연대와 교류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교류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야기함.
- ◎ 이에 정부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정책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중요함.
- ◎ 이에 본 연구는 세대별 특성을 고려 주거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 1인 가구 세대별 주거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배경 및 목적

- ◎ 1인 가구는 이제 특수한 집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나(미혼/비혼), 기존의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이혼/비자발적 별거), 가족구성원의 죽음(사별)등을 포함하는 결혼을 통한 가족형태의 변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과 고령층의 은퇴 시점의 변화,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식의 변화 등에 따른 것임.
  - ▶ 2023년 현재 전체 가구 중 약 41%가 1인 가구원 수 대비 1인 가구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년기로 전체 1인 가구의 22.0%이며,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는 위기 시 돌봄 공백, 연대와 교류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교류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역시 초래함.

● 이에 정부는 다양한 1인 가구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정책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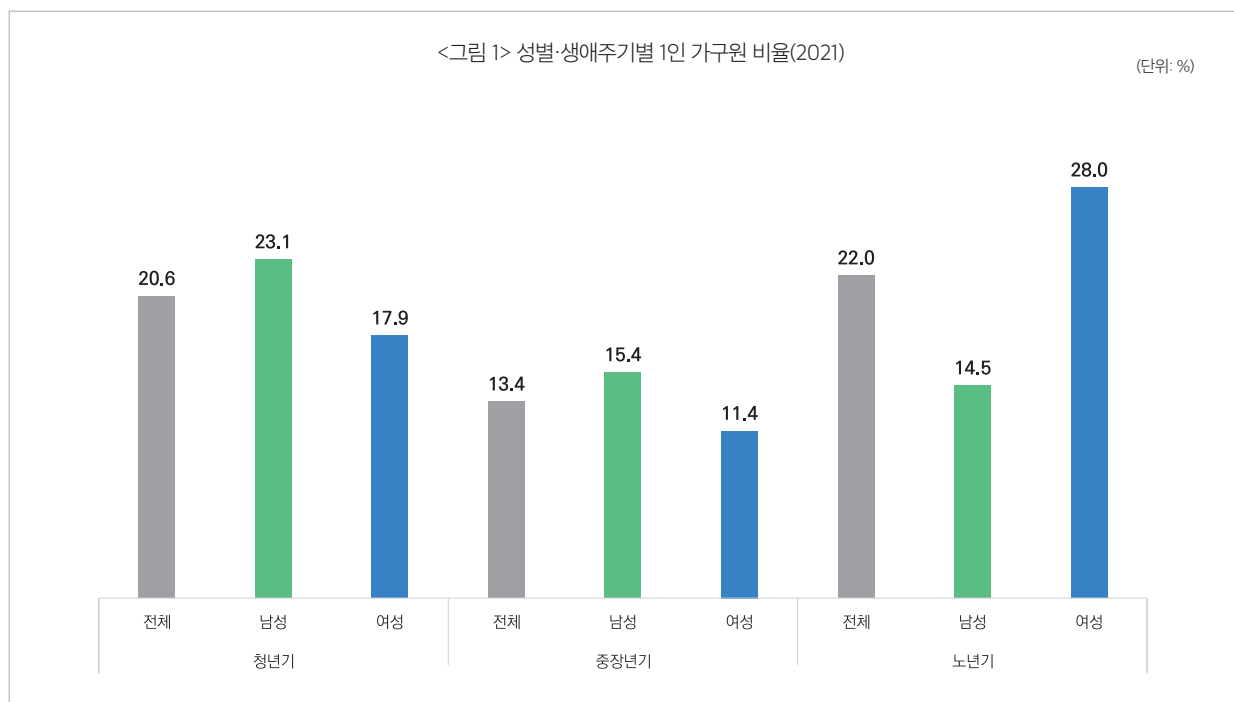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여성 대상 주거정책이 CPTED 중심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 개선 등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정책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교류를 통해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도 주목하기 시작함.

● 이러한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안전에 초점을 두어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 현황과 주거정책 수요

### ●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 현황

- ▶ 생애주기별 가구원수 대비 1인 가구원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년기로 전체 1인 가구의 22.0%를 차지함.
- ▶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전체 가구원 대비 1인 가구원 비율이 청년기 17.9% → 중장년기 11.4% → 노년기 28.0%에 이름.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9&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scrId=&segNO=&lang\\_mode=ko&obi\\_var\\_id=&itm\\_id=&conn\\_path=MT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9&vw_cd=MT_ZTITLE&list_id=A11_2015_1_10_10&scrId=&segNO=&lang_mode=ko&obi_var_id=&itm_id=&conn_path=MT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검색일 : 2023.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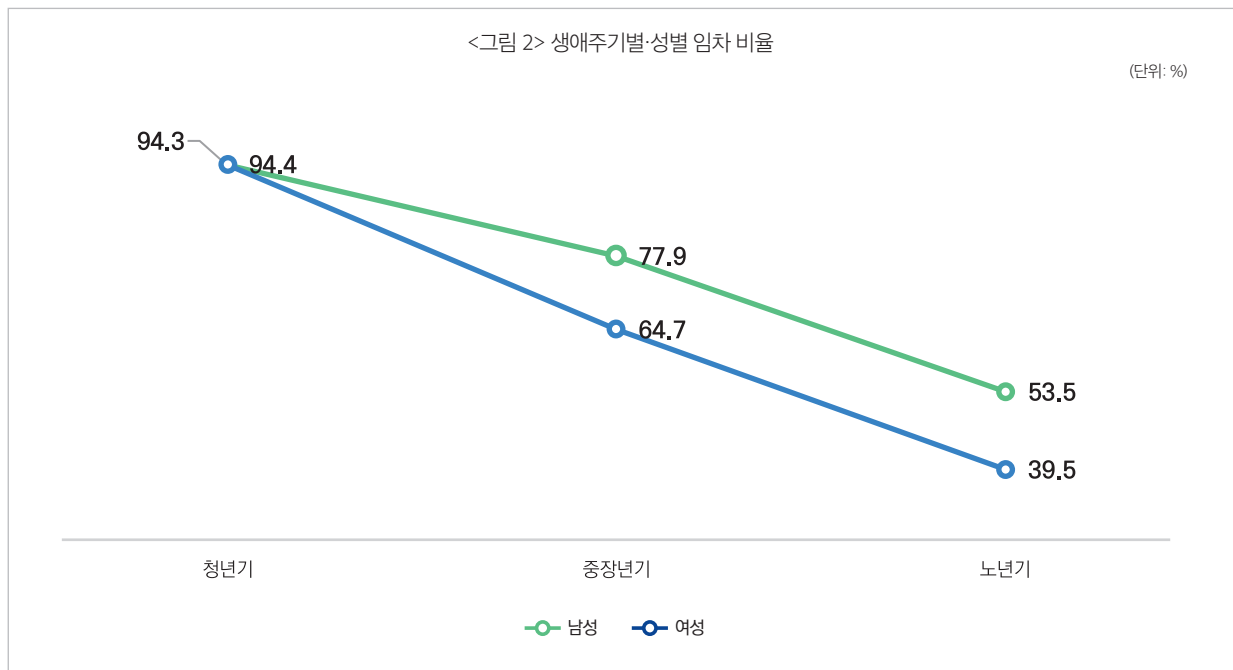
## 1인 가구와 주거정책 수요

### ▶ 노년 1인 가구

- 생애주기상 노년 여성 1인 가구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퇴와 이동성의 약화, 자녀의 분가로 인한 돌봄 공백에 직면하게 되면서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이 추가된 거주형태가 필요함.
- 노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중단으로 인해 기존주택을 활용한 추가적인 소득을 원하거나 주거 규모 축소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
- 거동이 불편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에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기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 ▶ 청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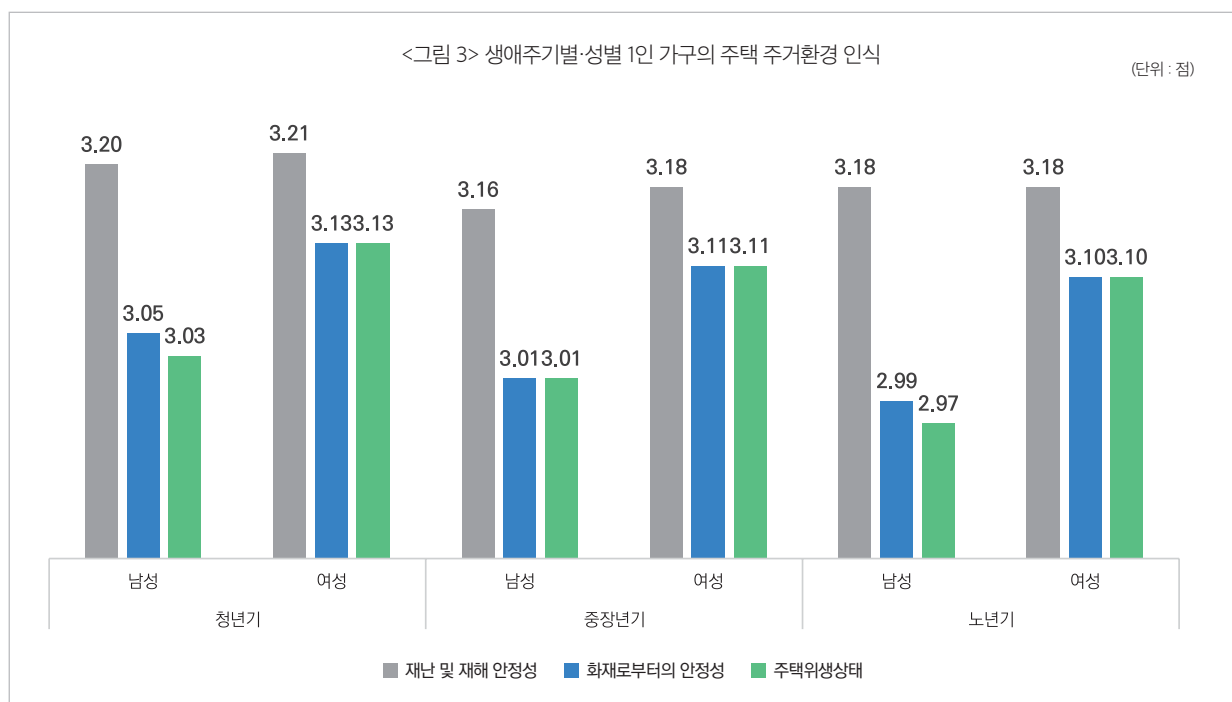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 가구의 1인 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청년들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이 늦어지고 있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과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이 청년 이후 생애주기로의 이행에 불안정성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서는 청년주택 27만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과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3만호)이 정책과제로 제시됨.



자료: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재분석

## ● 여성 1인 가구가 인식하는 중요한 주거정책

-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정책에서는 안전 문제가 중요함. 그런데 기존 주거정책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은 CPTED를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과 시설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정책 위주임. 이제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범죄 감시와 돌봄의 분담, 교류의 증진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 노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평생을 다른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동년배 남성 1인 가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음. 하지만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집에서 고령기를 보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함.
- ▶ 또한 노년 여성 1인 가구의 다수가 농어촌지역의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과 더불어 이동이 가능한 지역 내 주거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조하는 정책이 필요함.



주: 점수는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하다고 인식함  
출처: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재분석

##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 1인 가구의 진전 양상도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 아직까지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과 개인화된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처한 현실은 아직은 상이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고령자 주택은 공급확대 위주의 주택정책과는 다른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함.

### ● 청년 1인 가구

- ▶ 청년 1인 가구 대상 주택공급은 학생이나 취업준비 단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졸업이나 취업 등으로 조건이 바뀌어서 정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취업이 되지 않거나 청년으로서의 연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주거 불안감도 커서 취업 준비 중이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청년의 연령자격 요건을 좀 더 완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 노년 1인 가구

- ▶ 노인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랜 기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Age-friendly) 주택과 커뮤니티 조성이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함.
- ▶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식사를 비롯한 가사 지원, 질병에 대한 간병, 이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와 보호자의 부재시 야간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와 돌봄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노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직 정책의 도입 초기단계인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공급 정책의 대상이 현재는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음.
- ▶ 고령자 대상 주택공급과 돌봄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대상자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여부가 향후의 고령자 1인 가구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거공급, 주거 안전환경 조성,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교류지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표>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정책영역	세부영역	청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주거공급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 공급</li> <li>• 공동체 주택, 공동주거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월세 및 보증금 이자 지원 시 장기 저금리 융자 청년층 대상 주택의 월세기간 연장</li> <li>•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공급 시 여성노인 전용 주거시설 확보</li> <li>• 지원인력이 상시 거주하는 자립체험주택을 거쳐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이용케어 안심주택 모델로 확산</li> </ul>
주거 안전환경 조성	주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월세지원(혹은 주택바우처 제도)</li> <li>• 장기 저금리 지원(주택기금의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정원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제도</li> <li>• 중년 주거급여 분리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li> <li>• 세대통합형 주택 모델 개발</li> </ul>
	주거시설 개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주거수준 미달 주택 개조 지원(1실당 최소 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 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기준 충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노후주택을 고령자 맞춤형 시설로 개조 지원</li> </ul>
	공유공간 확충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li> </ul>	
	주거포털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산된 주택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제공</li> <li>• 노후화된 시설물과 도로 보수, 상하수도 정비, 노후주택 개선 지원</li> <li>•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li> </ul>	
	1인 가구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를 통한 출입통제 장치 설치</li> <li>• 조도 개선, 방범 시설물 설치 및 개선</li> <li>• 재난 위기 시 대피로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 살피기</li> <l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li> </ul>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와 안내판 설치 확대</li> <li>• 치안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과 활용</li> <li>•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집중 관리</li> <li>• 여성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 신속 대응체계 구축</li> <li>• SS(Safe Single)존 내 범죄취약 여성 1인 가구 대상 여성 안심홈 설치 지원</li> <li>• 여성 1인 운영 점포 대상 안심망 CCTV 연계 여성안심점포 운영</li> <li>• 여성 안심앱과 경찰과의 연계 지원</li> </ul>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교류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소한 공유 휴게공간 확대</li> <li>•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의 사각지대 해소</li> <li>• 세대 잠금장치, 외부 침입이 용이한 창문 교체</li> <li>• 출입구의 접근 통제, 보행로 개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도로 폭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 및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li> <li>• 지역사회 통합 돌봄시스템과 주택정책과의 통합</li> </ul>
	사회적 교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커뮤니티 활동 지원</li> <li>• 소셜 다이닝 등 공유문화 확산</li> <li>• 1인 가구 자조 모임 지원</li> <li>•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취약계층인 노년층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 실시</li> <li>• 일상생활 및 동행서비스 제공(반찬 및 목욕서비스 등)</li> </ul>
	사회적 고립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청년 1인 가구 대상 정서 및 심리 상담 제공</li> <li>• 메신저나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도입</li> <li>•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단절 노년노인 지원(LOT 기기를 통한 실시간 안전 확인)</li> <li>• 고립방지 및 웰다잉 지원</li> </ul>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li> <li>• 1인 가구 주거지원 담당부서 업무의 통합과 전담조직 확충</li> <li>•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돌봄 시스템과의 중복업무 조정 및 통합</li> <li>• 국토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안전업무 조율 및 협조체계 구축</li> <li>•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가족, 청소년 주택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안전 관련 업무 통합</li> </ul>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